

김광수, 개헌 · 정치개혁 위해 동분서주

야3당 개헌 단일안 마련 조찬회동... '야3당 개헌연대 촉구대회' 진행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이하 '헌정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 갑)이 개헌성사와 정치개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김광수)·정의당(심상정)·바른미래당(김관영) 등 야3당 헌정특위 담당의원들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개헌성사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등에 대한 야3당 단일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로터너리에서 열린 '야3당 개헌연대 촉구대회' 사회자로 행사를 진행하며 지난주 공동입장 발표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방문 등 야3당 개헌연대 활동경과를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 '야·야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개헌 성사 TV 끝장토론 실시!' 등 개헌성사를 위해 거대 양당이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에 대해 거대양당은 말잔치 뿐이며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고 마음은 이미 공발(지방선거)에 가 있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 개헌협상회의 추진, TV 끝장토론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성사촉구대회에서 야3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분권과 협치를 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할 정부 형태 타협안을 제시할 것을,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에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靑 "정치자금과 후원금 성격 달라"… 보도 반박

청와대는 18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재검증 과정에서 설문지 항목에 후원금 관련 설문은 존재하지 않아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후원금의 개념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조간 기사를 통해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이 직장의 공금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내규에 맞게 않게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항목이 명시돼 있다며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보도는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검증 설문(후원금) 해당 항목이 없었고 김 전 원장도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이후 문제가 있다고 하니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민정수석실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을 재반박 하는 차원의 성격이 짙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전 질문서의 문구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다.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며 "정치자금은 후원자들이 정치인에게 실시할만한 모아서 후원을 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공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김 전 원장의 경우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사용할 때 선관위에 '이렇게 써도 되는가'라고 물었던 것인데 사전 질문서의 그 항목에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질문서 항목에 명시된 공금은 정치자금법상 명시된 개념이고, 후원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김 전 원장의 재검증 과정에서 그 설문 항목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가운데 김 전 원장 등과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원장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한 인사시스템의 제도적 보완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남북 정상회담, 의례적 행사 최소화'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은 격식보다 실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18일 남북관계 상황과 문제인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남북 최고지도자 간 허심탄화하고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례적 행사를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방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의장대 사열 등의 의전 행사가 최소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판문점이 유엔군사령부 관할인 데다가 중화기를 휴대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예포 발사 등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남북은 지난 5일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한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실무회담을 가졌다. 정부가 '의례적 행사 최소화' 방침을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핵화라는 핵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발을 떼는 날인만큼 의전 등의 문제로 헛거북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청원인 "위법 판단 국회의원 형사처벌 · 세금환수 요청"… 한국당, 반대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출장을 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오전 12시30분 기준 20만 7000여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원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너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게 공직선거법에 위

반되고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 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는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과거 국회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문제제기 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를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는 헌정 유린 국회사찰"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사찰을 이미 했다. 이미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무슨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냐"고 주장했다. /뉴시스

靑 "드루킹, 정부 흡집 · 모욕 주려는 것처럼 보여"

청와대는 18일 포털 사이트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드루킹(Drinking)'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 모씨 사건과 관련해 "의문 제기 수준을 넘어선 정부여당에 흡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드루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도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어지러운 말들이 출몰하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며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했고, 정부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봄 날씨처럼 번덕스러운 비난에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과업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 하나만은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드루킹이란 별명의 블로거로 활동해왔다. 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7일 김씨를 구속시켰으며 이날 담당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